

# “청해부대 코로나 감염, 책임 통감... 장병·국민에 깊은 사과”

서욱 국방장관, 집단감염 대국민 사과 장병 301명 중 247명, 82% 확진 “백신관련 국외반출 협의 없었다” 국방부, 수송기로 복귀작전 펼쳐



서욱 국방부 장관이 20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 브리핑실에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국방부

서욱 국방부 장관이 20일 청해부대 34진 파병 장병들의 코로나19 집단감염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문을 올렸다. 지난 2월 출항한 청해부대 34진 장병 301명 중 현재까지 확진된 인원은 247명(82.1%)이다. 우리 군 초유의 해외 전염병 감염사태인 만큼, 서 장관의 심정이 무거웠을 것으로 보여진다.

최근 인사들에 따르면 서 장관은 최근 심리적인 부담감이 커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대국민 사과는 지난해 9월 그가 취임한 이래로 6번째다. 취임 이후 북한 귀순사 경계실패(2월 17일), 부실급식·과잉방역 논란(4월 28일), 공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6월 9일과 10일, 7월 7일) 등 굵직한 사건 등

이 이어졌고, 그 때마다 국민 앞에 고개를 숙였다.

이날 서 장관은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청해부대 34진 장병들을 보다 세심하게 챙기지 못해 다수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데 대해 국방부 장관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청해부대 장병 및 가족 여러분들과 국

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군은 해외파병 부대원을 포함한 모든 장병들의 백신 접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면서도, 지난 2월 출항한 청해부대 장병들에 대한 백신 접종 노력에는 부족함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해상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청해부대에 코로나19 백신을 후속지원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지만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코로나19 백신의 국외반출이 가능하다는 소견을 언론을 통해 밝혔다.

정 청장은 “국제법과 관련해서는 우리 군인에 대한 접종이기 때문에 제약사와 협의해 백신을 보내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 같다”면서도 “비행기 운송이나 배에서의 접종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검토하고 결정할 필요가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정 청장이 “코로나19 백신의 국외반출 협의와 관련해 국방부가 구체적으로 협의한 것이 없었다”는 입장을 밝히자 청해부대 34진 장병들에 대한 부실한 방역지원의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국방부는 시민들로부터 공분을 사게 되자 다급히 다목적 공중급유수송기(KC-330) 2대를 현지로 보내 이들 전원에 대한 복귀작전을 펼쳤다.

청해부대 34진 전원은 문무대왕함이 정박해 있는 아프리카 국가의 공항에서 탑승을 완료해 이날 오후 늦게 성남 서울공항으로 귀환하게 된다. 이미 약 82%의 높은 확진률을 보였듯, 성남 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확진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코로나19의 잠복기가 개인마다 다르고, 승조원 전원이 백신 미접종 상태에서 감염병에 취약한 ‘3밀’(밀접·밀집·밀폐) 환경의 함정 내에서 지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청해부대 34진 전원에 대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시행하고, 결과에 따라 국방어학원, 대전병원, 국군수도병원 등으로 분산 격리해 치료 등을 할 방침이다.

한편, 군 안팎에서는 2013년 남수단 파병시 군수뇌부가 현지정세를 파악하지 못해 탄약을 일본자위대에게 빌려야 했던 당시처럼, 이번 사건도 군수뇌부의 판단이 미숙했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문형철 기자 captinm@metroseoul.co.kr

## 렌터카 등 車 구매시 친환경차 구매 의무화

산업부, 친환경자동차법 의결 전기차 충전기 의무설치 대상 확대 국공유지 수소충전소 임대료 감면



신축 건물 뿐 아니라 아파트를 포함한 기존 건물에 전기차충전소 의무설치비율이 적용된다. 20일 오전 서울 중구의 한 아파트 단지내 지하주차장에 전기차충전소가 설치돼 있다. /뉴스1

전기차 충전기 의무설치 대상 건물이 기축건물로도 확대되고 공공 전기차 충전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반에 공개해야 한다. 렌터카 업체나 대기업 등은 자동차 구매시 일정비율 이상 친환경차로 구매해야 하고, 국공유지내 수소충전소 구축하는 사업자의 임대료 감면 한도가 80%까지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이하 친환경자동차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친환경자동차란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를 말한다.

우선 지난 2016년 전기차 충전기를 확산하기 위해 도입된 ‘전기차충전기 의무설치제도’가 제도 도입 이후 건축허가를 받은 신축시설에만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기축시설까지 확대된다. 이에 전기차 사용자가 선호하는 주거지와 생활거점에 전기차 충전기 설치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이 구축·운영하는 전기차 충전기를

보안과 업무수행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의무개방토록 했다. 이렇게 되면 전기차 충전기 의무설치대상이 아닌 연립·다세대주택 거주자도 인근 공공 충전기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전기차 충전기에 불법주차된 일반차량 단속과 과태료 부과권한이 광역자치체에서 기초지자체로 변경돼 단속효율성이 높아진다. 단속대상도 기존 의무설치 충전기에서 모든 공용충전기로 확대돼 전기차 사용자의 충전불편에 신속 대응이 가능해진다.

수소인프라 확산을 위한 내용도 포함됐다. 국·공유지내 수소충전소 구축시

임대료 감면한도가 50%에서 80%로 확대되고 혁신도시 또는 인접지역에 수소충전소 1기 이상을 구축하도록 의무화된다. 아울러 개발제한구역내 수소충전소 이외에 수소 생산시설, 출하시설 등 다양한 수소인프라 설치가 가능해져 수소충전소와 연계한 복합형태의 신사업 추진이 용이해 질 전망이다.

렌터카, 대기업, 버스·택시·화물 등 민간의 대규모 차량 수요자가 신차를 구입 또는 임차시 일정비율 이상을 친환경차로 의무구매하도록 하는 ‘친환경차 구매 목표제’가 도입돼 대규모 수요 창출도 기대된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 환경부,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반려

조류 서식지 보호방안 미흡 등 이유

가 미흡하다고 봤다.

환경부가 조류, 서식지 보호 방안 미흡 등을 이유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을 반려했다. 국토교통부는 이 사업을 다시 원점에서 재검토하게 돼 제주 제2공항 건설은 더 미뤄질 전망이다.

환경부는 국토교통부가 협의를 요청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했다고 20일 밝혔다.

국토부는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이 환경에 미칠 영향 등 관련 평가 서류를 환경부에 보냈다.

환경부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국립환경과학원 등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 검토한 결과 협의에 필요한 중요사항이 재보완서에서 누락되거나 보완내용이 미흡했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비행 안전이 확보되는 조류 및 그 서식지 보호 방안에 대한 검토

항공기 소음 영향 재평가 시 최악 조건 고려 미흡, 모의 예측 오류,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맹꽁이의 서식 확인에 따른 영향 예측 결과 미제시, 조사된 습골에 대한 보전 가치 미제시 등도 반려 사유로 꼽았다.

환경부는 또 저소음 항공기 도입 등 소음 예측 조건의 담보 방안과 함께 맹꽁이의 안정적 포획·이주 가능 여부, 지하수 이용에 대한 영향 등을 더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돌려보냈다.

국토부가 사업을 추진하려면 반려 사유를 해소해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다시 작성한 후 환경부에 협의를 요청해야 한다.

국토부는 환경부가 제시한 반려 사유부터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

## 산업부, 폭염 대비 전력수급 관리 총력

이번 주 장마가 물러가고 본격적인 폭염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전력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전력 수급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0일 서울북한발전본부 방문해 여름철 전력수급 관리상황을 점검하면서 “올 여름철 전력공급 능력은 예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지속되는 무더위 등으로 전력수요가 언제든지 급증할 가능성이 있다”며 “전력 유관기관은 비상한 각오로 안정적인 전력수급 관리에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문 장관은 이어 “계획예방정비 과정에서 추가 결함이 발견돼 당초 계획보다 정비가 연장됐던 원전이 정비를 마치고 재가동돼 이번 주부터 전력수급에

기여하게 된 점은 다행”이라고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최근 무더운 날씨로 냉방용 전력수요가 증가하고, 국내 경제회복에 따른 산업생산 증가 등이 복합 작용하면서 전력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다만, 7월 2주차 이후 전력수급(평일기준)은 예비력 8794·1만7289 MW로 전력수급 예비율이 10.1~22.1%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산업부는 이번 주 올 여름 최저 예비력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피크 시간대에 맞춰 기여할 수 있는 시운전 발전기와 태양광 연계 ESS의 방전 시간 조정 준비를 완료했다. 또 공급능력 확충을 위해 신월성 1호기(1GW)는 정비를 완료하고 원안위 승인을 받아 이번 주부터 가동한다. /세종=한용수 기자

## 안전사고 60% 화재... 캠핑용품 ‘주의보’

공정위·한국소비자원 3년간 관련 안전사고 396건 접수

캠핑장이나 야외에서 휴가를 보내는 사람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더 많은 주의가 요구된다.

여름철 캠핑용품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10건 중 약 6건은 화재 관련 사고다. 올 여름 휴가철엔 코로나19 장기화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20일 올해 여름 휴가시즌을 맞아 캠핑장 또는 야외에서 주로 사용하는 용품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캠핑용품 안전사고는 텐트나 캠핑용 의자, 야외용 버너, 화로대, 부탄가스, 코펠, 캠핑용 난로 등 캠핑 또는 야외에서 주로 사용되는 제품으로 인해 소비자 위해가 발생한 사고다.

최근 3년간(2018~2020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캠핑용품 관련 안전사고는 총 396건이며 2018년 115건, 2019년 139건, 2020년 142건 등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